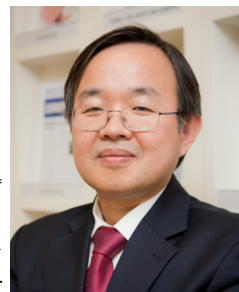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대응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연구전문위원

ykim@seri.org

1. 중산층의 중요성

중산층의 육성이 정부 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가 중산층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들이 두텁게 형성되는 것이 사회통합에 중요할 뿐 아니라 이들의 존재가 균형 있는 경제성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중산층은 또한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중산층의 두터운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중산층의 규모와 경제적 비중이 큰 것이 해당 사회의 안정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중산층이 두텁고 전체 소득 중 중산층의 경제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회일수록 소득불균형이 낮은 편이다. 중산층의 소득비중과 소득불균형을 말하는 지니계수 간의 상관관계는 0.96으로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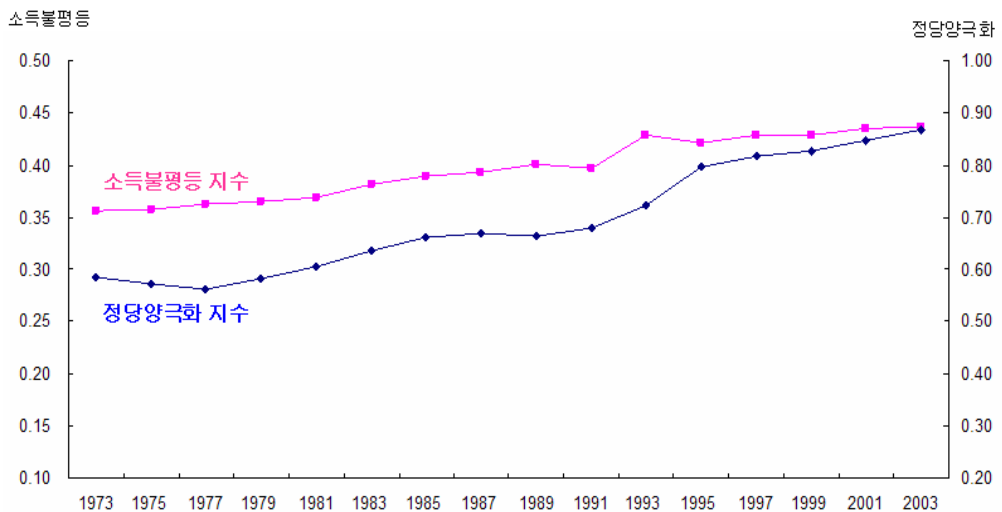
1)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영국 런던정경대학원(LSE) 경제학 석사, 국제정치경제학 박사
- 영국 옥스퍼드대학 로이터 펠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한국경제가 사라진다(21세기북스, 2004, 공저), 중진국 함정과 2만불 전략(이투스서, 2005, 공저), 한국경제 20년의 재조명(삼성경제연구소, 2006, 공저), 금융위기 이후를 논하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공저), 그외 한국중산층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2010, 삼성경제연구소) 등 논문 다수
- 이 글은 '김용기 외 (2010)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삼성경제연구소'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중산층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경제사학자 데이비드 랜즈스(Landes, David)에 따르면 "이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회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중산층을 가진 사회"이며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영국 중산층의 존재 때문"이었다. (Landes 1998)

중산층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그중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추어 주목해야 할 대목은 사회통합과 관련돼 있다.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된 사회는 사회통합이 촉진되어 갈등비용이 적게 들고 궁극적으로는 성장에도 기여한다. 전체 가구 소득 중 중산층 가구의 소득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 '중산층 컨센서스(Middle Class Consensus)'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의 확대가 심화되어 중산층의 비중이 줄어들면 정치적 불안정과 인적자본에 대한 과소투자를 결과하게 되고 결국 저성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Easterly 2001)

최근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사태는 적절한 예이다.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중산층이 축소되었기 때문이고, 양당의 첨예한 대결은 결국 시장의 불안정을 부채질해 경제적 어려움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림 1] 참조)



참고 : 1) 소득불평등 지수는 지니계수를 사용
 2) 정치 양극화 지수는 연방하원의 DW-NOMINATE Score를 사용
 자료 :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McCarty, N., Poole, K. & Rosenthal, H. (2006). Polarized America. Cambridge: MIT Press.

[그림 1] 미국의 소득불평등과 정치 양극화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 온건파 의원 수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양당 간에 이념적 거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소득의 불균형을 지니계수로 측정하고 양당 간 이념적 거리를 나타내는 정치 양극화 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0.96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McCarty, Poole, & Rosenthal 2006)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소득 양극화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 또한 현 시점에서 우리가 경청할만하다. IMF(국제통화기금) 수석경제학자를 역임했고 현재 미국 시카고 경영대학원 교수인 라구람 라잔 (Rajan, R.)은 그의 2010년 저작 <단층선들(Fault Lines)>을 통해 “소득 불균형과 이를 교정하려는 선부른 정치적 시도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했고 앞으로 또 다른 위기를 발생시킬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총 가구소득 중 상위 1% 가구가 차지한 소득비중이 1976년 8.9%에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23.5%에 달했고, 이에 따라 중하위층의 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비해 정체 내지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경제의 내수 위축과 저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업률의 상승을 결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함에 따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정책당국이 인위적으로 저금리를 지속시키고, 금융기관을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개발해 저소득층이 대출을 쉽게 받아 집을 사고,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분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통해 대출이자를 낼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손쉬운 정책이 결국 위기를 야기했다는 내용이다. (Rajan 2010)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교육투자라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양극화로 인해 부유층은 공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권은 차선책으로 금융 공급과 주택가격 상승을 통해 중하위층의 가처분 소득의 증대를 꾀했고 여기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의 싹이 뿌려졌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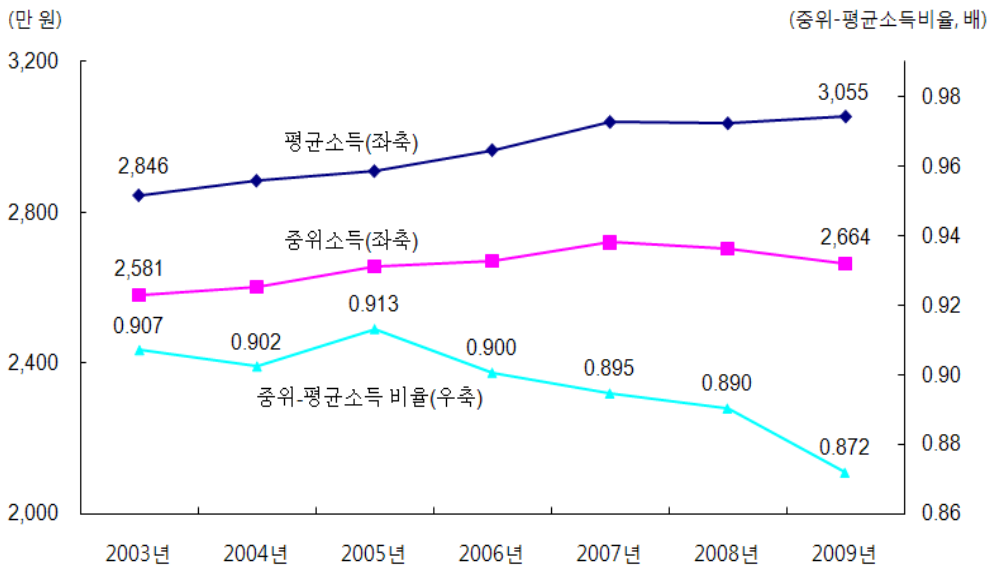
2. 중산층의 현황과 감소 이유

한국의 중산층은 1990년 대 중반 이래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득기준으로 볼 때 중위가구소득(소득순위별로 가구의 순번을 매길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닌 가구의 비중을 말한다.

한국 중산층의 규모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64%이고 민간연구기관 등의 분석에 의하면 55% 수준이다. 차이가 발생한 것은 분석 대상이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 아무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이라도 한국의 중산층은 1990년 75%에서 2003년 70.1%, 그리고 2011년에는 64%로 감소 추세이다.

중산층 중에서도 특히 핵심 중산층이라 할 중위소득 75~125%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비중이 집중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982~2009년 중 근로자가구의 소득을 3개 그룹(50~75%, 75~125%, 125~150%)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핵심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1991년 44.4%에서 2008년 34.3%로 하락하였다.

가구의 평균소득 대비 중위소득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중산층의 소득증가율이 전체 소득의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다. 2003~2009년 중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가구의 평균소득은 7.4% 상승하였으나 중위소득은 3.2% 상승에 그쳐 평균소득 대비 중위소득의 비율은 0.91에서 0.87로 3.9%가 하락하였다.(김용기 외 2010, 아래 <그림> 참조)



주 : 2인 이상 전체 가구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3~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김용기 외(2010)에서 재인용

[그림 2] 2003~2009년 중위 대 평균 소득 비율

중산층의 규모와 소득 비중이 축소하고 특히 핵심중산층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기술 변화와 세계화에 따라 중산층을 형성하던 중간 수준의 기술을 가진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BTC, Skill-based Technological Change)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지닌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반면, 중하위 수준의 기술을 지닌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소득의 변화로 반영되었는데 고급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임금 수준은 늘어난 반면, 중급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임금 수준은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과 인도 등 저임금 노동력을 가진 국가가 세계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수출된 저가 제품이 OECD 등 선진국의 중급 노동을 대체하게 되었다.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중국 인도 등으로 공장이전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중 일어난 경제의 서비스화 또한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과거에는 적절한 수준의 임금과 사회보장을 누리던 중간 수준 제조업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 자리를 금융이나 법률, 물류 등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 소수의 일자리와 낮은 수준의 다수의 일자리가 대체하였다. 생산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와 IT 및 자동차 부품의 모듈화에 따라 글로벌 아웃소싱이 일어나게 되었다. (Dallinger 2011)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20년간 중산층의 가구 수와 소득점유율이 줄어들며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었다. 평균 소득 및 중위소득이 늘어나긴 하였으나 중산층의 규모는 1.4%p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표 1> 미국의 중산층과 평균 및 중위소득의 변화 (1989~2009년)

| 구분 | 1989년 | 1999년 | 2009년 |
|--------|----------|----------|----------|
| 평균소득 | 57,772달러 | 66,722달러 | 68,409달러 |
| 중위소득 | 45,921달러 | 48,934달러 | 52,204달러 |
| 중산층 규모 | 44.49% | 43.79% | 43.07% |

주 : 1) 중산층 구간은 중위소득의 50~150%

2) 2009 CPI Index=100

자료 : U.S. Census Bureau, CPS 추계.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가구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졌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 대비 2011년의 가계소득을 보면 중산층의 비중(중위소득 50~150% 기준)은 65.2%로 동일하지만 하위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중위소득 50~100% 소득 가구는 5.3%p 증가하였고, 중산층 중에서도 중간층이라 할 수 있는 중위소득 100~1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는 5.3%p 줄어들었다.

3. 중산층 정책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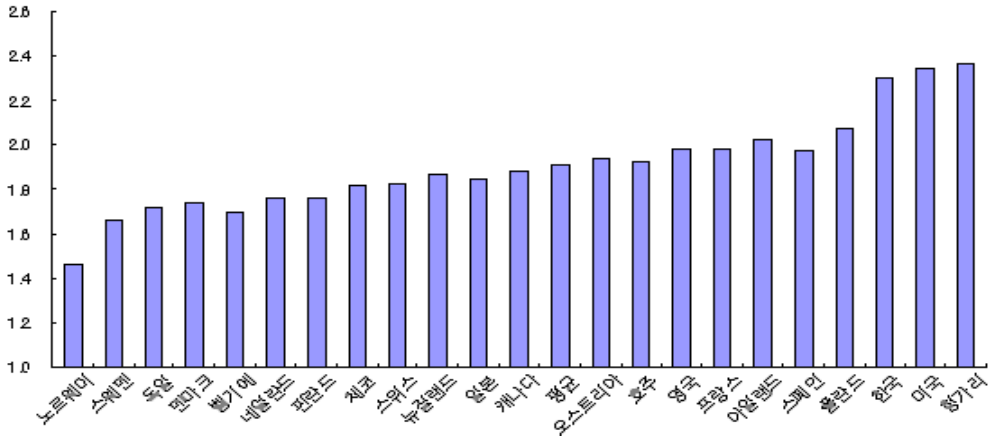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술 변화 등의 원인에 따라 중산층이 축소되거나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 중에서도 중하위(중위소득의 50~100%) 중산층의 소득 증가가 경제 성장 폭에 미달함에 따라 상위층 대비 시장소득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소득의 격차는 정부가 재분배기능(조세와 복지)을 통해 전부 교정할 수는 없다. 국민의 담세 능력과 의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장소득의 격차를 최소한도로 하면서도 성장을 촉진시켜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계층의 교육과 기술능력을 확충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생산성과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인(예를 들면 일류 대학 출신 여부에 따른 소득 격차) 근로소득의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OECD는 2012년 초에 보고서를 통해 성장친화적이면서도 시장소득의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육의 양과 질을 확대하고 높이는 것, 교육의 기회가 부나 사회적 지위에 의해 봉쇄되지 않고 최대한 형평성 있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을 철폐하는 것,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숙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여성의 고용을 확대와 학교 및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줄이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Koske, Fournier and Wanner 2012)

미국의 경우 오바마 집권 이후 부통령 바이든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산층 태스크포스(White House Task Force on Middle Class Working Families)를 중심으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태스크포스에는 노동, 보건, 교육, 상무, 에너지 장관 등 내각의 관료와 국가경제위원회, 경제지문위원회 의장 등 주요 정책당국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중산층의 보호를 위해 교육과 노동, 그리고 소득 부문 등 5대 사업목표를 천명하였는데, 그것은 교육 및 평생훈련의 기회 확대, 일과 가정의 균형 제고, 작업장 안전을 포함한 공정근로의 증진, 중산층과 근로가정의 소득 보전, 노년층의 사회안전망 제고이다.

시장소득의 격차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의 격차에서 비롯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최상위 계층과 중간계층 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OECD 국가 중 헝가리와 미국에 이어 3번째로 크다. 2008년 근로소득(gross earning)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9개 구간으로 나눌 때 한국은

최상위(9분위)의 소득이 중간(5분위) 소득의 2.30배로 OECD 평균 1.93을 상회하고 있다.



참고 : 총 근로소득(gross earning) 기준 5분위 소득 대비 9분위 소득의 배율(p90/p50)
 자료 : OECD (2009). OECD Employment Outlook.

[그림 3]근로소득 격차의 국제비교

한국의 근로소득의 격차는 개인적인 요인 이외에도 노동시장제도나 산업구조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상당 부분 좌우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근로소득 격차를 만들어내는 주된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선을 주요한 타겟으로 삼는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성장과 기존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세심한 설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 이외에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중 삶의 질과 무관한 주거 및 교육비용의 과다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중산층은 다른 나라에 비해 주거 및 교육 비용에 대한 지출이 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공적 부문의 역할과 이 부문에 대한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기 외 (2010)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삼성경제연구소
- Easterly, W., (2001) The Middle Class Consensus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6(4), 317-335.
- Dallinger, U. (2011) The Endangered Middle Clas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ole Public Redistribution Plays, LIS Working Paper Series.
- Koske, I., J. Fournier and I. Wanner (2012) "Less Income Inequality and More Growth – Are They Compatible?" Part 2. The Distribution of Labour Income",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925,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9h2975rhhf-en>
- Landes, D. (1998). *The Wealth and Poverty of Nation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McCarty, N., Poole, K. & Rosenthal, H. (2006). *Polarized America*. Cambridge: MIT Press.
- Rajan, R., (2010), *Fault Lines: How Hidden Fractures Still Threaten the World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